

‘지방 소멸위기 극복, 해답은 지역 몫 찾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균형발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민주당 중앙당 ‘썸 TV’로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인 우원식의원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소준호 우석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행정수도 이전과 과제, 메가시티의 네델란드(네트워크형), 미국 동부(회랑

민주 전북도당, 국가균형·전북 발전방향 토론회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중앙당 유튜브 채널인 ‘썸 TV’로 녹화 방송 예정

형) 등 국의 사례와 수도권 메가시티가 당면하는 문제를 토대로 국내 메가시티의 현주소와 전북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혁신적 발전의 전환이 필요하고 세종에 현재 행정도시가 있으나 불안정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전북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 동향과 전북의 대응 전략에 대해

행정수도권 배후 자족적 메가시티 육성(8분야 제안)으로 초광역 연계 협력사업과 전북 몫 찾기를 설명했다.

특히 전북형 뉴딜을 통한 생태 문명구축으로 정부대응과 정책친화 두 가지 분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했으며 지방분권의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권의 현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도적 대안이 ‘지방분권개헌

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광수 우석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토 균형 발전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2019년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자체가 97개(42.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택천 (사)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은 지역을 바꾸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전북이 아닌 스스로 지역을 바꾸는 지역 살림으로의 방향 전환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과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타지역 진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북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난하면서도 출산

율도 최저인 지역이 전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3년이 지난 지금 실천이 없었다는 쓰라린 반성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에서 혁신도시의 원포럼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 중이다”며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단순히 수도권 분산이 아닌 각 지역 특화발전으로 가자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고 전북의 지역소멸 우려를 수차와 통개로 접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있게 체감한다”며 “중요과제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의제를 뜨겁게 만들어가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호소문’ 발표

전주시의회가 추석명절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2일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추석명절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실천을 당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호소문에서 전북과 전주에서도 이미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에 걱정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 중 상당수가 노인층이어서 코로나 감염 예방에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각심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 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추석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장은 “만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면하고 민족대이동이 벌어진다면, 코로나 19 극복의 길은 영영 묘연해질 것이다”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앞서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과 김종관 부의장은 2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를 방문해 군경장병과 시설입소자들이 소외함을 느끼지 않도록 헌담을 나누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희재 의장은 “코로나 19로 시설에서 더욱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의회, 추석맞이

유관기관 방문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 의원들이 지난 21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 향토방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유관기관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무주경찰서, 무주119안전센터 및 7733부대4대대의 민생치안·재난예방 및 향토방위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에는 위문품이 전달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기로 했던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간으로 단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미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고창군수가 제출한 ‘우리말 빠르게 쓰기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4차 추경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 김수홍 의원 “장점마을 사태 해결 국가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직접 제안설명을 나섰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정치권에 행정기관에 손을 내밀었는데 전부 외면 당했다”며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치료 중이며 올해 7월에 한 분 9월에 두 분이 신장암,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장점마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임이 밝혀졌다”며 “관계 당국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책임이 확인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의 사과 ▲발암물질 원인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의 책임 규명 ▲정부의 피해 배상·보상 및 예산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원내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재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 장점마을 사태가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짐으로써 추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영문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과 사망을 겪어야 했던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당원·道와 소통 확대를”

민주 전북도당, 혁신위원회… 11월까지 혁신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제1차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22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 열린 이번 제1차 혁신위원회는 도당의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 반성하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윤준병 전북도당 혁신위원장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원과 전북도와의 소통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을 높여 전북도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및 공천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당 혁신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의제로는 정책연구소 설립 등 정책 역량 강화방안 (정책위원회 or 정책자문단), 당원과의 소통 및 확장방안,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공천의 혁신방안, 출마예정자, 선출직공직자 및 당원의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방안, 민주당 전북도당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의 선위원회장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원과 전북도와의 소통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을 높여 전북도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및 공천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북도당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4~5회의 의제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11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당 혁신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당내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유호상 기자

도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전북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빈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공론화 앞장

도의회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활용하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을 정치권과 관계 기관에 제안하는 등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송지용 의장이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두차례 만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등 인재개발원 공동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도의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지난달 6일과 12일 당시 이낙연 후보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없다”며 “지난해 지방의원 위탁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76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 교육기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선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현황 등을 살펴봤다.

지난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연면적 4만9,369㎡에 강의실과 도서관 강당 국제협력센터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지방5급 이상과 선출직, 공기업 임직원,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320여 과정 2,350여 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회도 찾아 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지원을 당부하고 국회의정연수원 등도 둘러볼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활용하면 별도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등도 공동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전국 어느 곳에 서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장은 “지방의회와 연대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방의정연수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등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을 통해 수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수산인연합회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으로”

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을 통해 수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사업으로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막대한 어업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으로 갯벌 상실, 어업활동 제약으로 과거보다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줘 자연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만금호를 담수화 대신 해수유통으로 전환해 수산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새만금 기본계획에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대규모 수산양식단지과 재생에너지 사업과정에 수산발전 공익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